

2.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6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8일
- 상정일자 :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4일), 수정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개정·위임사항 및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市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2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음.

-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조례·규칙의 제·개정에 앞서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 매년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 및 민관협의회를 두었음.
- 그 외, 규제개혁위원회 및 민관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개정 조례안은

- ▶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항제3호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먼저, 규제개혁의 배경과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 ▶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견지하면서 시장과 자원

배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초고속 압축성장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음.

그러나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면서, 그동안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던 정부규제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과 비판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 특히, WTO의 출범 등으로 국제화와 지구촌화가 가속화되자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는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더 이상 규제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대상황적인 요인으로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회복해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한층 강조되었음.
- ▶ 우리나라 최초의 규제개혁은 1992년 설치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당시의 규제개혁 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됐고, 본격적으로는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 3월 1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1998년 4월 18일 설치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회복에 시급한 핵심 규제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음.

- ▶ 이와 연계하여 대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후 타 조례 개정에 의한 개정 외에는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세계적 경제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제도를 전면 보완하게 되었음.

○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조례안은 본칙 5개장 2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개정 조례의 목적에 따라 변경하였음.

(현 행)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개 정)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 ▶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 ~ 안 제4조)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입안 목적, 적용 범위, 규제 원칙,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안 제1조**는 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시책의 심의·조정과 규제 심사·정비 등의 종합적 추진을 하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의 적용 범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와 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시 문서와 공고문서로 한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 규제의 원칙은 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 **안 제4조**에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고, 그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음.
- ▶ **안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안 제5조 ~ 안 제9조)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철회와 개선에 관한 권고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는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의 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예비심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아니라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 제6조**는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부서장에게 심사 대상규제 여부에 대한 예비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심사로서 위원회 심사를 갈음토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른 소관부서장의 처리 계획과 처리 결과 제출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 **안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안 제10조 ~ 안 제11조)**에서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하고 소관부서장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토록 하였으며, 기존규제의 정비절차와 구속력은 **안 제2장**을 준용하였음.
- ▶ **안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16조)**에서는 규제 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심사범위를 규정하고,
 -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그러나, **안 제16조제1항**에서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전문성과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적위원 중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으나, **안 제13조**의 위원구성(안)에 따르면 15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또한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규정하여 결과적으로는 같은 조 내에서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에서는 총괄부서장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 **안 제18조**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등의 출석을 통한 의견 수렴이나,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 **안 제5장 민관협업 등(안 제19조 ~ 안 제23조)**에서는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포상과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불이익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신고 고객 보호 장치를 마련·공포토록 하였음.
 - **안 제20조**에서는 민간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정하였음.
 -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에서는 포상과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23조**에서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 **안 부칙**에서 시행일과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명시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전부 개정안은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침체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규제신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기존규제의 전면 재검토, 민간중심의 규제개혁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안 제5조의 심사 요청과 안 제16조의 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조례 해석의 이론적·체계적 모순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절히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개정안 제6조에 예비심사 규정이 있지만, 안 제5조에서는 소관부서장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제5조의 일부를 바꿔서 서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 총괄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 예비심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됨.
○ 안 제16조 제1항을 보시면,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2항에는 재적의원 1/2이상이면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사유는?	○ 15명의 위원 중 8명 이상의 전문가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려 한 것이지만, 문맥상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 상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음.
○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어 의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법제업무 담당인력 증원이나, 법제업무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구시 의견은?	○ 법무담당관실이 소청이나 소송 등의 분쟁업무가 많다 보니, 간혹 법제심사가 다소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음. 법제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지역법제협력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으로 법제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한 충분한 심의와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신규규제 심의는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토록 하고, 다수의 민간위원 참석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조와 안 제16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붙임 '위원회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5조(심사 요청)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규칙 등 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 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규제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야 한다.</u>	제5조(심사 요청) ----- ----- ----- ----- ----- ----- ----- <u>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 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u>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동위원 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u>이 경우 의장이 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되,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u>	제16조(회의) ----- ----- ----- ----- ----- ----- ----- <u>제></u>
② ~ ③ (생략)	② ~ ③ (제출안과 같음)
제17조(간사) <u>위원회에 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u>	제17조(간사)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u>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시책의 심의·조정과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시문서와 공고문서

제3조(규제의 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조(심사 요청)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규제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규제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처리 계획과 처리 결과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0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제3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권고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
2. 제7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제11조에 따른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5.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가 발굴 또는 의견 수렴한 규제에 대한 심의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의장이 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되,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 삭제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민관협업 등

제1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총괄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규제신고센터에 규제 개선, 고충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현장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규제개혁 과제 발굴

2.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3.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민간부문과 협력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포상) 시장은 규제개혁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